

팔복동 공업지역 공장입지 규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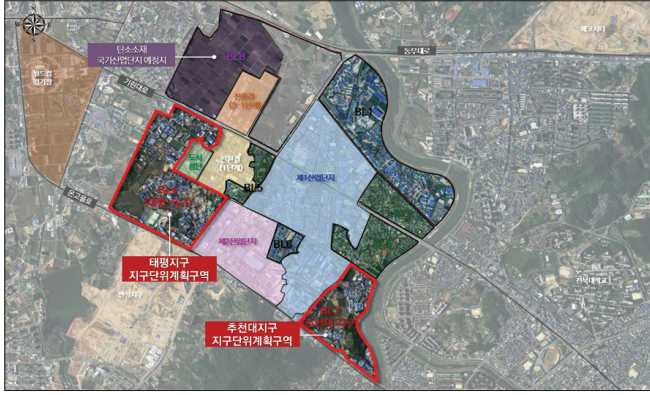
전주시, 불합리한 규제사항 정비·건폐율·용적률 완화제도 마련

전주시가 기업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팔복동 공업지역의 공장입지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기존부터 운영해온 팔복동 공업지역 내 공장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 생산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만성지구 등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업지역 내 폐기물 및 SRF(고형연료제품) 소각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팔복동과 여의동 일원 공업지역(162만1633㎡)에 대한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장입지 규제를 제한하고, 일반 공장의 입주업종과 대기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등을 강하게 규제해왔다.

하지만 기존 일반 공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생산장비를 증설하는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



태평·추천대지구 위치도

물질 저감시설 등 법령 의무시설까지 제한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기업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일반 공장 및 제조시설의 생산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이었던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유해물질 배출 농도가 높은 공장 및 시설, 폐기물 및 SRF 소각시설에 대한 규제사항

은 보다 명확히 정비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 3종 이상·수질 4종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공장 및 시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를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발생 및 배출 농도가 높은 공장, 폐기물 소각시설 및 SRF 제조·사용시설에 한해서만 제한을 받도록

완화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부터 있던 기존 일반 공장 및 제조시설들이 환경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 생산장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 내용을 정비했다.

여기에 시는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할 때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해 공업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공업지역 내 폐기물·SRF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그동안 수차례 민·관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를 유지하면서 일반 공장 및 제조시설들의 생산활동에 불합리한 규제사항만 정비하는 사항"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전주시민 2명이 위기에 처한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주시장 표창을 받았다.(사진 왼쪽부터 김명복 씨, 우범기 전주시장, 박영문 씨)

생명 구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표창

김명복·박영문 씨에 전주시장 표창장 수여

전주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전주시민 2명이 위기에 처한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전주시는 1일 전주시시장실에서 노인일자리 활동 중 시민의 생명을 구한 김명복 씨(68)와 박영문 씨(66)에게 전주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장 수여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니어클럽의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단인 '농촌인력증개 활성화 지원단'에 참여하고 있는 표창 수상자들은 지난날 완산구 중안동 소재 비닐하우스 농가에 방문하던 중 밭에 쓰러져 있던 조 모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 후 응급조치를 취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조 씨에게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

늘막을 만들어 환자를 보호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급차 도착 후 환자 이송에 도움을 준 이들의 노력으로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회복한 뒤 안전하게 귀가했다.

김명복·박영문 씨는 이날 "평소 기관에서 받았던 응급처치 안전교육 덕분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표창장까지 받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두 분의 선행은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대상 보증료 최대 30만원

전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

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주)(SGI)이다.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만 지원하던 이 사업이 지난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된 만큼 전세반환보증 가입자 중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가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거주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중 연소득 기준(세전)으로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5000만 원 △청년 외 일반가구 6000만 원 △신혼인 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시는 신청일 기준으로 효력이 유효한 임차인이 가입해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

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관련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전세 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이 확대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지역 4개 장례식장,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이어간다... 지원사업 지속 시행

전주시가 전주지역 4개 장례식장과 함께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시는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고려병원 장례식장, 시티장례문화원, 온고을장례식장, 효자장례타운 등 4개 장례식장과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 지원사업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참여한 장례식장들은 상주에게 1회

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문화에 대해 홍보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상주가 다회용기를 이용한 친환경 장례문화에 동의하면 조문객에게 다회용기에 음식을 제공한다. 이에 따른 세척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는 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주에코워싱 사업장을 통해 초음파 세척과

고온고압 세척을 거쳐게 되며, 세척 후 소독·살균 및 오염도 테스트를 거쳐 위생적으로 제공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들 4개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보급하는 등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이후 이들 장례식장에서는 40건의 다회용기를 이용한 장례가 치러졌으며, 이를 통해 38만개 이상의 1회용품을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착수

전주시가 봄철 해빙기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붕괴 위험이 있는 아중호수 진입로 급경사지의 비탈면을 안전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내년까지 총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구역의 급경사지를 안전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아중호수 일대에서 관광 명소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향후 방문객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더불어 교통환경 개선 및 기존



도로의 급커브 구간도 개선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아중호수 생태터널과 연결해 직선화 도로와 인도도 개설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옥기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김영태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부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